

## 국가인권위를 제자리에

2008 프레시안 기고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인권단체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지난 17일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인권사안을 제쳐두고 인권단체들이 왜 지금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말하고 싶다.

### 국가인권위가 뒤흔들

세상살이에서 이런 저런 억울한 일 당할 때 법은 멀고 돈은 없다. 내 하소연 들어주고 전달해줄 곳 찾기 어렵다. 보통사람들이 그러하다면 인권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국제인권기준을 들이대도 뭘 소리인지 조차 모르는 권력기관엔 쇠귀에 경읽기이고, 인권단체의 말을 경청하기는커녕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호소를 받아도 '군대, 경찰, 교도소' 등 민간인인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법원보다 가깝고 돈이 안들며 신속한 인권구제를 제공하고, 인권침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향상을 도모하는 인권전담기구가 국가인권위다.

유엔에서는 일찌감치 1950년대부터 각 국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권했다.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인권침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반성하는 것과 아울러 감시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라는 거였다. 이런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이라는 간판을 들고 국가기관을 휘젓고 다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짚어대는 '경비견'이라 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 오랜 산통과 출산

오랜 군사 독재하에서 이런 것을 알리 없었던 우리가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귀동냥을 한 것은 1993년 열린 세계인권대회를 통해서였다. 전세계 정부 대표와 민간인권단체들이 인권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야, 우리도 국가인권기구를 한번 가져보자'는 꿈을 꿴다. 정부쪽에서는 98년 인권대통령을 외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식용' 국가인권기구 구상이었다.

'장식용'이라 함은 한국에도 국가인권기구가 있다고 말하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다는 말이다. 정부가 구상한 것은 법무부 산하의 국가인권위였고, 별반 힘이 없는 홍보성 기구였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않은 국가인권기구는 오히려 독이라고 맞서 싸웠다. 3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국가인권위 설치는 멀어져갔고, 별반 자원이 없는 인권단체들은 몸으로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7년 전 겨울, 인권활동가들은 명동성당 들머리를 찾았다. 노숙단식농성을 하기로 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연말연시의 소란함 속에서 단식농성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20년만



의 폭설과 혹한만이 우리를 찾아와 주었다. 그속에서 감행한 13박 14일의 노숙단식농성은 침낭과 비닐에 붙은 얼음덩어리를 떼어내고, 눈사람이 돼서 하루종일 피켓을 들고, 얼굴에 동상이 걸리고, 탈진해서 쓰러지는 날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과 무시가 깨지고 물건너간 국가인권위 설치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국회를 찾아가도 상대를 안해주던 의원나오리들이 직접 농성장을 찾았고, 입다물었던 언론이 깨어났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국의 국가인권위 설립을 주목했다. 정부의 치장과 위장이 아닌 투쟁속에 설립되는 국가인권위의 상을 국제적 모범사례로 지지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 그 어느 권력기관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성'을 갖고 태어났다.

### 7년 후 다시 제자리에

7년 후 우리는 다시 제자리에 있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또다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식이 아니어서 그나마 덜 힘들다고 쓴웃음을 짓는데, 7년 전 얼굴동상 걸렸던 활동가도 7년 전 촛불집회 때마다 울었던 울보활동가도 오늘 또 노숙농성장에 있다.

혹자는 왜 인권단체가 국가기구를 지키려 하나고 묻는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투쟁은 한 개의 국가기구를 사수하려는 투쟁이 아니라 인권 사수 투쟁이다. 이기심의 자유경쟁을 극도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는 예상하고도 남는 일이다. 어느 부문을 불문하고 광풍이 몰아칠 것을 우린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는 그 신호탄이다. 안 그래도 '제왕적'인 대통령이 밀어부칠 인권침해가 불보듯 뻔한데, 국가인권기구마저 수하에 두겠다는 시도를 어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국가인권위 설립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주범인 국가권력이 인권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낯선스라는 지적이 많았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장치이다. 국가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과도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국민'의 '인권기구'이다. 국가인권위가 국가의 다른 어떤 기구와도 차별성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호의무를 갖지만 현실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이라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제도적 대안이다(유일하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인권침해 기구인 국가에게 갖추도록 하는 일종의 반성장치이며, 스스로 감시건을 풀어놓고 인권침해에 대해 언제나 짚어대라고 만들어낸 장치다. 그런데 이 짚어대라는 감시건이 권력 앞에서 얌전히 엎드려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독립성'이고 이 독립성은 여타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동아줄이다.

그간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대해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 역시 공무원이고 뻔뻔하고 무능할 때가 많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여타 권력기관에 인권의 이름으로 권고를 해



도 잘 먹히지 않는다. '독립성' 외에는 별반 무기가 국가인권위에는 없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에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정부가 국가인권위 힘빼기 작전으로 돌아서서 권한을 대폭 줄였던 탓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이 그런 허약한 국가인권위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그나마 사회적 약자들이 부여잡을 동아줄을 끊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치장·감옥·군대·경찰·복지시설 및 학교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 민간인권단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아쉽게나마 진정서라도 보낼 수 있는 곳, 그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가 국가인권위다. 나아가 감옥·경찰·군대·사회복지시설 등의 책임자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수 있고, 어느 권력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사회관습과 여론에 맞서서 참신하고 진보적인 인권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인권전문기구이다. 이런 기구를 권력자의 손에 두면 과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짚어대기만 하고 물어뜯지 못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분명한 한계이다. 오히려 물어뜯는 일은 인권의 주체들과 인권운동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인권위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인권운동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권현장 속에서 할 일을 계속할 것이며, 결코 국가인권위에 기대지 않는다. 그러나 당면한 국가인권위의 고사를 막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동아줄을 잘라버리는 일이며 권력자에게 굴복하는 것이라는 책임을 통감하기에 7년 만에 또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게 되는 일은 인권의 감시권을 권력자의 애완견으로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독립성을 주었는데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독립성부터 뺏으려는 시도를 보아 넘기지 말 것을 호소한다.



##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화 관련 인권활동가 토론회

■ 일시 : 2008년 1월 27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향린교회 1층

■ 사회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 참석 :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 KANOS (※속기록 미비로 누락된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사회 : 급하게 투쟁을 시작하면서 생각의 편차들이 많은 것 같다. 국가인권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투쟁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투쟁이어야 하는가의 문제. 그래서 오늘 집중토론을 준비했다. 발제가 준비되었지만, 이것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뜻을 모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류은숙 씨가 오늘 발제문을 썼지만, 오늘 아르바이트가 있어 참석은 못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발제 : 왜 지금, 국가인권위 독립성 사수 투쟁인가?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 박래군 설명

■ 토론 : 같이 싸/울/거/라/고 얘기하자구요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미류 : 국가인권위가 냈던 의미있는 권고도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부족한 게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인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투쟁 과정 속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투쟁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국가인권위와 다른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권고를 통해) 우리 투쟁을 지지한다는 것이 싸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 권력 그 자체는 아니지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 기구이다. 인권위가 7년 전 노숙단식농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들 한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이다. 비유하자면, 존재를 몰랐던 이복형제의 소식을 들은 느낌이랄까. 인권활동가 내부의 인식이나 감수성의 차이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발제문에 있는 '반인권 도발의 신호탄'이라는 표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투쟁의 수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다.

■ 전체토론

□ 투쟁 속도감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발제문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신 분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정리해주었으면 한다.



□ 한 단체 안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한편에서는 인권위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성이 중요한 건 맞고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농성투쟁이나 지난 독립문 투쟁처럼 연행이나, 벌금까지 감수하면서 할 투쟁은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국가 인권위의 위상을 과도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필요하지만 하나의 도구이고 국가기구일 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수'까지 하는 투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 진정에 대한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나 1년 넘게 진정을 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권위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의견도 있다. 배움터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 그래서 불신이 광범위하고, 실제로 경험한 인권위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우리 단체 안에 있다.

□ (인수위로부터 비롯된) 지금 국면은 인권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위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번에 직속화가 되면 다음 단계에는 법무부 산하로 옮길 수도 있다. 어제 촛불집회에 오신 분 중에서 법무부의 의견 조화를 받았다는 법학자가 있었다. 법무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회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재 인수위 입장이 폐지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자기 밑에 두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이 뭔지 토론해 보자.

□ 촛불집회 하면서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국가기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국가기구는 활용의 대상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회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권위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국가인권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는 인권단체의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권위의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등을 제어하는 것도 인권운동의 힘이다. 그리고, 인권위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보니 멀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투쟁이) 인권위를 살리는 투쟁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인 듯하다. 이런 점에서 인권위는 양면적이다. 또, 인권운동이 못하고 있는 것을 인권위가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기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롤러코스트를 탈 때 힘없고 약한 사람은 정말 힘들지 않은가. 전반적인 인권의 약화라는 것은 힘없고 약하고 특히 조직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들 것이다. 발제문에도 있듯이 인권기구를 살리는 투쟁이 아니라 인권 자체를 지키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양면적인 인권기구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인권운동의 힘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다.

□ 지금 이 자리에서 인권위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되짚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떤 운동은 필요하고 어떤 운동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국면에서 투쟁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토론해보자. 인수위의 의도, 투쟁과 관련된 동향 등이 궁금하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들의 의견을 유추해서 정리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이 운동에 집중해서 토론해봤으면 한다.

□ 그래도 싸움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이견에 대해 토론하고 왜 싸워야 하는지 토



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투쟁의 옹고 그룹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활동가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지금 투쟁은 처음 투쟁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것이지만, 회의에 못 오신 분들이나 충분히 공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속도감의 차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얼마나 같이 공유하고 풀어내는가가 중요하다. 투쟁기획팀에게 그동안의 투쟁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기획하고 가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 투쟁 실무에 직접 관여한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좀 더 얘기를 하면 좋겠다. 투쟁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얘기하면 좋겠다.

□ 투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단체 내 토론이 아직 되지 않았다. 온도차이랄까. 반대하지는 않지만 꼭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인권위 점거나 이것저것 인권위와 접촉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권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것 같다.

□ 오늘 토론하면서 인권위에 대한 평가가 토론되면 이번 투쟁이 인권위를 지키는 투쟁으로 왜곡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투쟁은 인권의 가치에 대한 투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을 드러내는 투쟁이다. 동시에 인권위의 문제를 드러내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런데 투쟁하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투쟁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왜 인권위를 지켜야 하느냐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좀 더 고민해 보자.

□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권위 사수투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 (왜 인권위를 지켜야 하느냐 정도의 내용으로는) 내용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인권위에 대한 평가와 분리해서 토론해야 한다는 것은 일정 동의하지만, 그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 인권위는 다른 기구와는 다른 것 같다. 어떤 국가기구를 만들면 관련 운동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십상이다. 마치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모양새 말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경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운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권위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과거사위의 경우, 마치 자기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싸우는 것으로 보일 위험도 있다. 예전에 인권위 만드는 투쟁을 할 때 왜 이걸 만드냐는 생각을 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잘 감시하지 않으면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았다. 인권위가 생기면 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치고 나갈 텐데, 인권운동은 인권위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게 역량상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인권운동을 하면서 저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력이 안 되니 뭔가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게 되었다.

□ 인권위 사수투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어떻게 제대로 해갈 것인가, 어떻게 투쟁의 의미가 드러날 것인가를 토론했으면 한다. 투쟁기획팀



이 한정된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각 부분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다.

□ 그냥 넘어가기에는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인권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동안의 투쟁은 마치 인권위를 지키려는 투쟁처럼 보였던 측면이 있다. 이것은 투쟁의 내용이 준비되지 않아서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인권위가 이명박 밑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권현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말이다. 인권위를 지키기 위해 열일을 제쳐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투쟁해야 하는지가 차이가 있다. 주거권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발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지금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투쟁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좀 더 토론해 보자. 이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그런데 얼마나 역량을 투입해 싸워야 하는지는 토론해야 할 과제이다.

□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보자. 여태까지 들었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은숙 활동가가 발제문에 썼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모르니까, 문제제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예상되는 상황, 국회 동향 등을 얘기해주시면 토론이 좀더 편할 것 같다. 긴박성에 대한 판단 등. 나머지 발제 후에 추가 토론을 하면 좋겠다.

■ 발제 -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흐름과 고민할 거리  
- 박래균

□ 이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는 의도는 잘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하다. 싸움을 한번 붙으면 이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싸워서 이길 경우와 질 경우, 2라운드는 어디에서 붙을 것인지 계획을 가지지 않으면 이번 투쟁에서 성과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 다른 건 몰라도 인권위는 인권운동가들이 힘들게 만든 것인데, 여기에 대해 밀리지 않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 이명박이 정권을 잡으면서 막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일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첫 사건이었다.

□ 반인권적인 발언을 하는 이명박 밑에 인권위를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인권위가 '빨깃'을 많이 해서, 밤새 농성을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싸움에서는 이기면 좋겠는데, 이기는 과정에서 투쟁이 발전할 수 있다면 인권위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감시와 태클까지 가면 좋겠다.

□ 인권이라는 말이 다의적이어서 여기저기서 쓰일 수 있다. 인권위가 하는 발언이 사회적으로 인권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인권의 언어가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입장을 대변해서 왜곡될 위험이 있다. 우리의 언어를 뺏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갔다 왔다. 감옥 안에서도 (소속에서) 인권위 진정을 권장할 정도인데, 감옥의 처우개선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몇 군데 통로 가운데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 진정이다. 그런 면에서 발제에 동의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 만약 100명이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과연 그 가운데 몇 명이나 인권위에 진정을 할까? 3-4명 정도가 아닐까? 그나마 제기된 진정을 인권위가 제대로 처리할지도 걱정이다. 그래서 농성하는 게 빨쭈한 느낌이 여전히 있다. 인권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인권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투쟁을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인권위가 지금 대통령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듯하다.

□ 비슷한 고민이 있다. 농성하면서 매일 투쟁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는데, 우려되는 것은 정권이 인권을 들고 무엇을 할까이다. 지금은 한국이 미국처럼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나라는 아닌데, 그런 식의 정치화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이번 싸움은 그 실효성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싸움은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싸움인데, (그런 면에서) 내가 만나는 노숙당사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싸움을 시작했으니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 앞으로의 인권상황이 매우 우려되는데,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정확한 목표를 얘기할 수 밖에 없고, 인권위 독립성을 표면에 놓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인권위 독립성 얘기하면서 사회적 약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독립성이 유지되더라도 이런 일을 인권위가 열심히 할 거라는 전망도 들지 않는다. 그래서 기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인권활동가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다른 싸움에는 투쟁의 주체가 있지만, 이 싸움은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투쟁할 때 굉장히 힘들지만 희망적이다.

□ 투쟁의 논리 가운데 인권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표현보다, 인권위의 의견을 이끌어냈다고 표현하면 좋겠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인권위를 감시하고 입장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기더라도 (이런 일을 겪은) 인권위가 더 보신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 부분 부분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풍부히하면 이게 어떤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올인할 것인가는 아직 토론되지 않았다. 정치권과의 관계, 국제기구의 활용 등을 해나가는 정도가 아닐까? 투쟁수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라는 대명제에는 동의가 된다.

□ 인권위가 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북한인권에 대해 독립성이 침해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인권위가 소외계층에 대해 해오던 일이 축소되지 않을까.



□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여성단체 활동가로서 여성가족부 문제에 대해 체감하는 바가 많다. 상담소들을 경쟁체제로 밀어넣는 등, 우리단체의 경우 여가부에 대해 더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느낌이다.

□ 인권위를 참여정부 때 수없이 점거한 당사자로서, 인권위가 대통령 산하가 되면 더 많이 점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웃음)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언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폭로하는 투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 기구만의 싸움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척도와 관련된 싸움이다. 그런 싸움이 국가인권위 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시각의 차이는 있다. 그런데 싸워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무기력한 인권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싸우면서 한발 더 나아간다면, 지더라도 후회 없이 싸운다면 더 큰 변혁을 위해 좋지 않을까. 인권운동 내부에서 이번 투쟁을 통해 더 폭넓게 그리고 깊게 연대하는 것이 투쟁의 또 다른 의미가 되겠다. 대중적인 힘이 없을 때는 좀 더 상징적인 투쟁과 과감한 투쟁전술, 정확한 소통과 신속한 실천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우선순위를 뭘로 해야 할 것인지는 고민이다. 진정으로 이 투쟁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계속된다. 내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대중들을 만날 때 고민이다. 지금도 24시간이 부족하고 뭘가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고민이다.

□ 투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투쟁의 수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투쟁기획팀이 개인사정 때문에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해 보자. 반차별공동행동이나 성소수자단체, 병역거부자 등. 그리고 2월 1일로 일단 농성을 정리하고, 설 연휴 이후에 다시 투쟁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자. 그전까지는 현재 투쟁수준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투쟁기획팀에서 논의하자.

(이후 구체적인 투쟁방법 등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있었음. 상징적인 투쟁을 투쟁기획팀에서 논의해서 안을 내자는 쪽으로 이야기 됨)



## [발제] 왜 지금, 국가인권위 독립성 사수 투쟁인가?

### 1.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는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도발의 신호탄이다.

이기심의 자유경쟁을 극도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는 예상하고도 남는 일이다. 어느 부문을 불문하고 광풍이 몰아칠 것을 우린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는 그 신호탄이다. 인권운동이 이 첫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이후 펼쳐질 각종 생존권 투쟁,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수 투쟁 등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인권운동과 이명박 정부의 힘겨루기의 첫판이라는 데서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다.

### 2. 국가기구 사수가 아닌 인권 사수 투쟁이다.

왜 우리가 국가기구를 지켜줘야 하나고들 묻는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투쟁은 하나의 국가기구를 사수하려는 투쟁이 아니라 인권 사수 투쟁이다.

국가인권위 설립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주범인 국가권력이 인권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낯선스라는 지적이 많았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장치이다. 국가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과도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국민인권기구'이다. 국가인권위가 국가의 다른 어떤 기구와도 차별성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호의무를 갖지만 현실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이라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제도적 대안이다(유일하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인권침해 기구인 국가에게 갖추도록 하는 일종의 반성장치이며, 스스로 감시권을 풀어놓고 인권침해에 대해 언제나 짚어대라고 만들어낸 장치다. 그런데 이 짚어대라는 감시권이 권력 앞에서 암전히 옆드려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독립성'이고 이 독립성은 여타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3. 인권투쟁의 역사성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정권의 악세사리로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변질돼왔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정권의 악세사리 구상을 깨부수고 인권운동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두 차례의 노숙단식농성, 각 부문을 아우르는 70여개가 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단결과 국제연대를 통해 정권의 '장식용 국가인권위' 구상을 깨뜨리고 바꿔냈다.

결코 무용담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20년만의 흑한과 폭설 속에서 감행한 13박 14일의 노숙단식농성은 침낭과 비닐에 붙은 얼음덩어리를 떼어내는 일로 시작해서 물건너간 국가인권위 설치의 불씨를 되살렸다. 국회를 찾아가도 상대를 안해주던 의원나오리들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 사죄를 했고 입다물었던 언론을 깨웠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국의 국가인권위 설립을 주목했고 투쟁속에 설립되는 인권위의 상을



모범사례로 지지했다.

그 결과 인권운동은 법무부 수하에 홍보용 악세사리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서 '독립성'을 쟁취했고,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에는 그 경직성과 소극성에 맞선 투쟁을 통해 국가인권위를 끊임없이 견제했다. 인권운동이 스스로 만들었으며 지난한 투쟁의 결실인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잃고 허수아비가 되버리게 놔두는 것은 운동의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 4.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동아줄이다.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처음 설립됐을 때도 독립성 외에는 별반 무기가 국가인권위에 주어지지 않았다. 인권운동에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내용을 수밖에 없었던 정권이 국가인권위 힘빼기 작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이 그런 미약한 국가인권위의 설치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허약하나마 사회적 약자들이 부여잡을 동아줄을 끊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복지시설이란 미명하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유치장·감옥·군대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 민간인권단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아쉽게나마 진정서라도 보낼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가 국가인권위다. 나아가 감옥·경찰·군대·사회복지시설 등의 책임자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수 있고, 어느 권력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사회관습과 여론에 맞서서 참신하고 진보적인 인권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인권전문기구를 어찌 저들의 손에 내맡길 수 있는가?

#### 5. 인권위는 비판과 감시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권위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인권운동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협조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권 현장 속에서 할 일을 계속할 것이며, 결코 국가인권위에 기대지 않는다. 그러나 당면한 국가인권위의 고사를 막지 않고서야 우리의 비판과 감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통령 소속이 되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릴 국가인권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앞서 말한 대로 국가인권위는 인권이라는 간판을 들고 다니며 짚어대는 '경비견'이라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을 휘젓고 다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짚어대는 것이다. 짚어대는 것에 대해 물어뜯는 일은 인권의 주체들과 인권운동의 몫이다. 감시견에 재갈을 물리는 일을 가만 두고 보는 것은 인권운동이 할 일이 아니다.



## [발제]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흐름과 고민할 거리

### 1.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상황들

#### 1) 국내 정치 상황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었고, 오는 28일(월)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것임. 임시국회는 28일부터 열리게 됨.
- 인수위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원칙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반응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음. 그것은 언론에 북한 인권전담기구를 모색한다는 입장들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음. 한나라당은 인수위와 동일한 입장임.
- 대통합신당은 아직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손학규 대표의 입장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어젯밤 늦게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 긴장해야 할 것 같음. 신당은 손학규 대표의 언명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고수한다는 입장에서 여성가족부를 통일부와 같은 위상으로 고민하고 있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중을 낮추려 한다는 언론의 보도와 정치권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즉 여성가족부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을 의식하여 총선용으로 방어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는 것임.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정부조직개편특위의 비공개 회의와 내일 오전에 열릴 최고위원회가 이에 대한 논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일 것임.
- 민주노동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국가인권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힘이 미약한 상황임.
-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가 비상체제를 가동하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전개하고 있음. 그렇지만 인권단체들의 강경한 입장이 어떻게든 전달될 필요성이 있음.

#### 2) 국제적인 흐름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ICC 의장이 성명이 나왔고, 계속 국제인권단체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오는 1월 31일부터 2박3일 동안 태국에서 열리는 포럼 아시아 총회에서 아시아 단체들의 향의가 조직될 것이며,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인터넷에서 계속 향의를 조직하고 있음.
- 미국에 가 있는 김덕진 활동가의 노력으로 오늘부터 로스앤젤레스 한국 영사관 앞에서 한인들이 1이 시위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있음.
-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종합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반응을 모아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야 함.
- 루이스 아버 씨에게 우리의 투쟁을 알리고, 방문을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음.

### 2. 고민할 경우와 내용들

#### 1) 이후 전개될 몇 가지 경우들

- 현재와 같이 정치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 현재와는 정치적 계산속에서 타협하는 경우
- 또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경우 등을 고민할 수 있음.



2) 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위의 투쟁을 2월 1일까지 하면서 내부를 다지는 활동에 치중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보다 수위 높은 투쟁을 고민해야 함.

3) 정치권이 타협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는 투쟁의 수위를 한껏 높여야 할 것임. 일단 이 경우에도 2월 1일에 농성을 풀 수 있는 경우와 이어가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함.

4) 이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여 기초를 정하고, 그 기초에 따라 투쟁계획을 할 수 있는 책임단위를 설정하고, 책임단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제출하고, 그를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함.

5) 일단 정치상황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농성은 유지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임.

(끝)



## [토론] 같이 싸/울/거/라/고 얘기하자구요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큰 비닐봉투를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덮어쓰고 침낭 속으로 들어가 고개를 말아놓고 잠을 청했다. 낮부터 밖에서 돌아다니느라 추위에 익숙해졌는지 잠이 올 것도 같았다. 나는 여기서 왜 자고 있을까.

문득 널판지 종이박스로 잠자리를 만들어 하루밤 하루밤을 보내는 노숙인 아저씨들 모습이 생각났다. 인권이라는 말이 생소하고, 그냥 생소했다기보다는 웬지 내가 쓰게 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절, 우연찮게 만나게 됐던 노숙인 분들과 '부랑인시설'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여기 있게 해준 불씨기도 했다. 인권운동을 하면서 인권침해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고민을 나눌 때에도 늘 한켠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노숙당사자모임 아저씨들이었다. 그 분들에게 이 싸움을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을까.

사무실에 있다보면 자주 오는 전화 중 하나가 감옥인권시리즈를 받아볼 수 있냐는 문의 전화다. 감옥관련법령/판례/훈령예규를 모아놓은 세 권의 책은, 벌써 2006년 4월에 절판됐는데도 꾸준히 문의전화가 온다. 감옥인권팀이 없어진 지도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상담편지들이 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책은 절판돼서 볼 수가 없다, 관련 상담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연락해보시라는 이야기를 공손하게 하는 것뿐이다. 감옥인권팀은 내가 단체 활동을 시작할 때 이미 사그라들기 시작한 팀이라 내가 잘 모르는 활동이다. 하지만 수감자들의 인권 문제를 빈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으로 넓게 보면서 운동을 더욱 버리려던 노력은 신입활동가 교육을 받으며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다.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나마 하고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마운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도' 갇힌 자들의, 억압받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쉼터일 수 있기에, 그/녀들에게 이 싸움을 같이 하자고는 못하겠다.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서 의미있는, 국정방향과는 다른 목소리가 국가기구의 이름으로 나온 적도 있으니 고맙지 않냐고, 그/녀들에게 말할 수 없다. 나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구이기 이전에 국가기구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안'에서 걸러내는 장치일 뿐이다. 오염된 물이 공장에서 강으로 흘러나올 때 정화장치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다. 인권운동은 오염된 물을 공장에서 내보내지 않도록 물이 필요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제몫으로 한다. 비싸고 질 좋은 정화장치를 구하기 위해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그저 인권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하려는 인권'활동가들만'의 싸움인 건가. 인권을 침해당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싸움인 건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구상은, 인권 '따위'에 국정이 흔들릴 리는 없다는 이명박(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실현의 의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국가기구/권력의 정당성 '따위'는 모두 허구임을 증명할 뿐이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서, '국가'가 더욱 인권실현을 위해 정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따위'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권은 억압의 실체를 구성하면서도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성장해온 것이기에, 그 안에 자신의 부정을 내포하고 있지



만 그래서 더 큰 긍정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또 영원히! 우리의 언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조금 더 애써야 할 몫이 있다면 인권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 싸움에서 절대 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싸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편인 것은 아니다.

한달 전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사였던 이를 초청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강의를 열었다. 강의를 끝나고 나는 "사회권은 시장경제의 필수 요소입니다. 건강하고 충분한 구매력을 지닌 근로자가 모든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문장에서 드러난 강연자의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질문을 던졌다. 진행을 맡았던 인권위 직원은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임의로(질문자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통역을 생략시켰다. 항의한 후 강연자에게 답변을 듣기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맞다, 틀리다 가 아니다. 실제로 인권은 자본주의체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을 때 최대로 실현된다. 인권이 '기준'의 언어가 되면 그렇다. 인권운동이 지켜야 할 인권은 '저항'의 언어다. 한국보다는 선진적인 판례를 내놓고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듯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운동의 편이나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과 저항의 언어로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구분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인권위원회가 제앞가림해서 지켜내야 할 목표다. 그것도 지킬 능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더 지켜내겠는가.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의 이 싸움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싸움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권은 결국 우리가 지켜낼, 우리의 것임을 증명하는 싸움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노동당사자모임 아저씨들에게, 또다른 인권침해 당사자들에게, 시린 날씨에 맨몸으로 한강을 헤엄쳐 건너기도 했던 노동자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장애인들에게, 같이 싸우자고 얘기할 수 있겠다. 당신들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쉬울 지도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언어를 이명박이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랜드 뉴코아 노동자들이 한여름 불별거리를 달굴 때 간절하게 쫓아다니다가, 거리도 식고 소리도 잦아드는 겨울 농성장에는 한번밖에 가보지도 못했다. 어처구니없는 표적단속 강제추방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장을 옮겨가며 싸움을 이어갈 때 촛불집회 한번 나간 것이 전부다. 겨울밤에 노상노숙농성하려니 춥고 시리더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다. 그냥 그런 게, 탄압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게, 낮익어져서 술 한 잔에 걱정 몇 마디에 인권운동한답시고 체면차렸던 내 모습이 무안하다. 어설픈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을 거다. 그냥, 나 이제 같이 싸워요, 당신들이 이미 오래동안 해왔던 싸움을 나 이제 쫓아가요, 이제 우리가 같이 싸/운/다/고 얘기합시다, 이명박 '따위'가 우리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짓밟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같이 싸/울/거/라/고 얘기하자구요.

-----  
토론회 논의 내용

일시: 2월 1일 5시 향린교회



정리: 명숙(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사회자)

○ 참가단위 : 장추련, 장애인권 발바다, 노숙인당사자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반차별공동행동 및 hiv/aids 감염인연대 카노스, 외노협, 사회진보연대, 불교인권위, 천주교인권위, 인권연구소 창, 민주노동당 관악지구당 학생위 당원, 민변, 부산인권센터, 민주주의 법학연구소, 진보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중간에 나감)

○ 발제하고 두 개의 주제로 논의함

(발제 내용은 발제문으로 대체)

### 1. 평가를 중심으로 토론

• 사랑방 재용: 발제에도 나왔지만 1차 농성 때 국가인권위에 대한 통제에 대한 것이 부족했다. 인권위의 독립을 넘어선 구호를 개발해야하는데 잘 안되었다. 실제 국가 인권위가 최근 이주노동자(수바수 동지의 경우)에 대한 강제구속에 대해 의견을 매우 경찰폭력에 한정해 입장을 낸 것에도 드러나듯이 한계,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구호가 인권위 독립에 대한 얘기로 한정할 경우 설득력이 없었던 거 같다.

• 연구소 창 류은숙 : 이번 투쟁의 성과는 7년전 투쟁과 다르게 이 싸움에 붙은 연대단위들이 소수자들을 중심으로 한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는 국가인



권위설립투쟁 당시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인권위에 대한 통제, 감시, 비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7년 전에 만들어 놓고 감시하는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인권위에 들어가서 자리차지하는 경우 밖에 없었는데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추상적인 것을 넘어서 인권위에 대한 통제를 자기투쟁 경로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 장추련 김광이 : 장차법이 입법되었지만 대통령 직속화되면 실행주체인 인권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실추된다. 그런 점에서 독립성 확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이명박식 경제개발논리에 말리지 않는 인권의 수호가 중요해서 함께 했다.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전략을 짜야 한다.

- 반차별공동행동 및 hiv/aids 감염인연대 카노스 강석주: 반차별 공동행동을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했다. 공동행동을 하면서 차별금지의 사유가 일부 삭제되면서 차별을 조장 가능성이 짙었기에 행동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대통령직속기구가 된다면 더욱 문제는 커질 것이다.

## 2.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

- 사랑방 래군: 2차 투쟁의 시기와 조직(인권감시단)을 제안한 내용대로 만들면 되는 건지 의견을 주었으면 한다.

- 인권교육센터 들(준) 영원: 2월 2차 투쟁에서는 인권위가 직속기구화 되면 인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비어 있었는데 이를 채우면서 이제 방임 넘어선 견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인권감시단을 만들자는 주문은 무리인 것 같다. 네 가지 주제 다 좋고 동의되지만 조직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 사랑방 재용: 지금 관련한 연대기구도 많은데 그 조직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궁금하다. 반차별공동행동이 소수자 차별반대 팀에 다 들어가는 거를 의미하는 건지도 불투명하다.

• 진보네트워크 여경: 구체적인 조직에 대한 상을 제안한 것이라기보다 공동의 '의제'를 잡은 취지로 이해했으면 한다. 이후 투쟁에서는 의제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합의하는 과정이었으면서 한다.

• 사회: 다음투쟁에서 의제를 확대하자는데 동의하는 것 같다. 그를 위한 공감을 형성하자라는 취지였으니 여기서 조직 제안을 토론내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논의는 2차 투쟁 재개와 그 시기를 2월 12일에 시작하는 것은 동의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여 하겠다.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 민주법연 김선광: 국가인권위는 어찌보면 인권이 자라기 위한 숙주일 뿐이다. 인권위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인권위 활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나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싸움으로 28일 통과를 막아냈지만 단지 출발선일 뿐이다. 오늘 국회갔는데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정해졌지만 큰 고민의 흔적이 없어 국회 내 여야 협상가능성 등 유동성이 매우 강하다.

• 사회 : 2월 11일부터 국회가 재개가 되고 현재 19일에 본회의가 상정되었는데 구체적인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등 조직개편안 의제 상정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전에 2차 투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2차 투쟁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

• 참석자들 동의 표시함 이에 따라

• 사회: 2차 투쟁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2차 집중 투쟁에서 인권위 독립성에 한정되지 않는 제목으로 투쟁을 꾸려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었으면 한다.



• 발바닥 박옥순 : 1월 통과는 막았지만 2월 통과도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인권위 제 기능 강제, 이명박 정권의 경향을 볼 때 보다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이에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 사랑방 채용: 지금 있는 여러 연대 기구들이 한 주제로 묶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각자의 활동내용을 모아 자료로 뿌린다던가 하는 것 같이..

• 연구소 창 류은숙: 2차 투쟁에 동의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으로 인권감시단이라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의미다. 더구나 '단'이라는 것이 붙는 것은 정적이고 협소하다. '행동' 처럼 동적인 것이면 좋겠다.

• 사람들(?): 2차 집중투쟁 주체들 명칭은 현재의 명칭에 이명박 정권이 반인권성에 대한 규탄, 투쟁의 내용이 추가되도록 작명하여야 한다는 의견 다수 표시

• 천주교 인권위 조백기 : 국가인권위 한계, 문제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독립성 확보가 마치 수호처럼 보인 것은 우리 싸움에서 이데올로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차 투쟁에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려면 영역별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한 단위들이 대표성 있는 논의를 해 와서 투쟁기획팀, 투쟁단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사회: 단위에서 논의할 내용을 정리하고 참가단위를 확인하겠다.

논의내용과 합의 내용 정리

① 2차 투쟁을 2월 12일 재개한다.



② 오늘 참가한 단위별로 2차 투쟁과정에서 의제(국가주의 반대, 개발주의와 공공성 강화, 소수자 차별반대,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화저지)의 확대와 방식에 대해 논의 한다.

③ 오늘 참가하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화 반대투쟁에 함께 했던 지역인 대구, 광주, 부산, 울산 그리고 성명서나 입장을 낸 단위에 대해서는 1차 투쟁의 실무단이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토의해줄 것을 소통한다.

④ 단체에서 논의해서 2월 10일(일) 오후 4시에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니 이에 장애, 반차별 공동행동 등이 새로운 단위들이 결합하도록 한다.

• 사랑방 아해 : 이명박은 경제가 살면 국민들 모두 잘 살수 있다고 밀밥을 많이 줬고 d에 사람들이 넘어갔다. 이제 우리들도 이러한 이명박에 맞선 우리의 내용으로 맞밀밥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우리내용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 장추련 김광이 : 동의한다. 경쟁논리에 맞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인권의 내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필기한 내용을 위주로 하다 보니 누락된 것도 조금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고 수정하거나 보탬 것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논 평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에 반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정부기능의 축소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독립적 국가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이룩해 온 인권분야의 성취를 크게 후퇴시키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독립적 인권옹호기구로 설립된 것은 우리 사회가 걸어온 민주화와 인권 증진의 성과가 특정 권력과 집단에 의하여 후퇴되는 것을 막고 시민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사법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결단과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과정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대상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행정부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그 감독대상중의 하나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두게 될 경우, 인권위원회는 감시대상인 대통령의 지시와 업무보고, 감독을 받게 될 것이며, 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분야에 대한 의제설정과 권고 및 조사 기능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행정부는 인권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우리사회의 인권 개선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 봉사하여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것이다.

인수위의 이번 방침은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맞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강력한 인권옹호자이자 동시에 침해자일 수 있는 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인권감독기구를 설립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기초로 세계 각국이 제도화한 기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하는 독립된 인권기구와는 동떨어진 무늬만의 인권위원회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현재와 같은 독립적 국가기구로 존치하는 것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했던 국민의 여망을 따르는 것이다.

신정부가 인권위원회의 위상변경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음과 반대운동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월 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 차별과 비싼 약값이 에이즈 감염인 죽음 앞당긴다

직장 건강검진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즉시 고용주에게 알려져 해고를 당한다. 이들을 시한폭탄 취급하는 국가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감시한다.

[21호] 2008년 01월 30일 (수) 23:57:39 엄기호 ('팍스로마나' 가톨릭지식인문화운동 동아시

엄기호 제공

에이즈 감염인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는 에이즈 치료 보장을 위한 집회 모습.

지금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는 천막도 없이 맨바닥에 침낭만 덮은 채 노숙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이다. 윤 가브리엘 씨(40)는 이들을 지지 방문하기 위해 힘겹게 명동 언덕을 오른다. 마음 같아서는 이들과 함께 노숙 투쟁을 하고 싶지만 그의 몸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시력도 약해지고 걷는 것도 편하지 않은 '에이즈 감염인'이다.

지난해 담당 의사는 그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다른 감염인과 달리 국내에 나온 치료약 모두에 다 내성이 생겨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초국적 제약회사인 로슈(Roche)에서 나온 푸제온(Fuzeon)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로슈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푸제온을 한국에 공급하기를 거부했다.

가브리엘 씨는 다국적기업의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지금 당장 로슈 사가 생산하는 푸제온이라는 약을 써야 하는 환자다. 왜 푸제온의 약값이 비싸야 하는지 대답하라"고 절규했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한국 정부 역시, 2003년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을 강제 실시하려는 환자의 절규를 외면했을 때처럼 푸제온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의 친구들이 나섰다.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미국의 에이드포에이즈(Aid for AIDS)라는 구호단체와 연락이 닿았다. 그들은 가브리엘 씨의 사연을 듣고 푸제온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다. 조건은 그의 진료를 담당할 의사와의 원활한 소통이었다.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이 가브리엘 씨에게 부작용이 없는지 세밀히 협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다.

그러나 한국의 의사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 에이드포에이즈는 결국 푸제온 제공에 난색을 표했다. 이미 한쪽 눈을 실명하고, 남은 눈마저 점차 희미해져 가는 상황이었다. 가브리엘 씨 친구들은 에이드포에이즈 측에 한국 의료기관과 의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제야 에이드포에이즈는 '한국의 특수상황'을 인정하고 푸제온을 한국으로 보내주었다.



이것은 가브리엘 씨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5000여 명에 달하는 에이즈 감염인의 이야기이고, 글리백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백혈병 환우의 이야기이다. 어쩌면 가족 중 누군가의 병 치료를 위해 평생에 한 번은 약을 구하러 뛰어다녀야 할지도 모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 국가와 의료인이 에이즈 감염인 치료 방치

가브리엘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야기에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초국적 제약 회사와 권위적인 한국의 의료체계, 국민 생명을 외면하는 국가, 그리고 이 문제를 인권이 아닌 도덕의 문제로 백안시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 담겨 있다.

직장 건강검진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즉시 고용주에게 알려져 해고당한다. 이들을 시한폭탄 취급하는 국가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감시한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이웃에게 알려져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도 국가는 모른 척한다. 에이즈가 그렇게 쉽게 옮겨지지 않는 병이라는 것을 아는 의사조차 감염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감염인은 사회 편견이 두려워 한마디도 못하고 지하에 숨어 쥐죽은 듯 살아간다. 가브리엘 씨의 말처럼 이들은 '에이즈 때문이 아니라 사회 차별과 비싼 약값 때문에' 죽어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의 인권 현실에 대한 실태도 조사하고 강제적 직장검진이나 실명 등록제를 반대하면서 에이즈 예방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는 등 그래도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온 곳입니다. 이런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한다면 저 같은 감염인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이것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윤 가브리엘 씨가 다시 칼바람을 맞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하는 까닭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

[의제27 공개편지] "'대통령 직속 인권위'는 민주주의의 후퇴"

2008-01-29 오전 10:53:16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은 지난해 가을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우리 사회에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사이의 생산적인 정책 경쟁의 장(場)이 되기를 바라고, 그 장에서 진보와 개혁 세력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기 위해 모인 연구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 보수 세력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새롭게 정부를 담당할 보수 세력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마음 속으로 바라마지 않아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라는 경쟁에 기반한 절차에 있으며, 이 절차는 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건대 현재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나름대로의 논리와 철학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은 보수와 진보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리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나라이건 선거를 통해 어떤 세력이 정부를 담당하게 되더라도 인권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내걸어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에 두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당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행정·입법·사법부의 밖에 세워두기로 한 것입니다. 인권위가 어느 하나에 귀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그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인권위의 활동이 작지 않게 위축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은 인권위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입니다. 며칠 전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나치게 권력층의 코드에 맞추느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 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너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 동안 인권위는 비정규직 법안 반대, 이라크전 파병 반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정책에 맞서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헌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난 7년 동안 인권위의 활동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 두 가지 사례로 인권위의 활동 전체를 평가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는 우려는 인권위의 활동이 혹시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정치논리로 인수위가 인권위의 위상에 접근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태도에 있다기보다 비정규직 법안 반대나 이라크전 파병 반대와 같은 인권위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에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논리로 인권을 접근하게 될 때 인권위의 활동은 자연 제한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무엇보다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직이며,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민주화 과정의 소중한 성취이자 최후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인권위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조건입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독립성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민주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라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안을 인수위는 가능한 빨리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우리의 목소리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1월 29일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

고원(서울대, 정치학), 김근식(경남대, 정치학), 김연철(고려대, 정치학), 김영범(한림대, 사회학), 김윤태(명지대, 사회학), 김정훈(성공회대, 사회학), 김종걸(한양대, 경제학), 김태일(영남대, 정치학), 김하수(연세대, 국어국문학), 김호균(명지대, 경제학),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문진영(서강대, 사회복지학), 박용수(서강대, 정치학), 박은홍(성공회대, 정치학), 박준식(한림대, 사회학), 서동만(상지대, 정치학), 서보혁(이화여대, 정치학), 손혁재(경기대, 정치학), 안병진(경희사이버대, 정치학), 오현철(전북대, 정치학), 이상이(제주대, 예방의학),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 조현옥(이화여대, 정치학), 정상호(한양대, 정치학), 정해구(성공회대, 정치학), 최태욱(한림대, 정치학) 홍종학(경원대, 경제학)



[논평]

인수위는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훼손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하라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국가인권위, 방송위)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을 가져온다고 얘기할 뿐, 그 어디서도 이러한 독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인수위의 이러한 인식은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국가인권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한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정부 수립과정에서나 그 이후 광복한 국가폭력을 경험해 온 국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인권존중과 신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동안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국가인권위 설립운동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한 것이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인수위의 인식은 역사를 거스르는 작태이다.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면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인권침해의 감시자인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에 속한 어느 누가 행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게다가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1년 설립당시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기존의 3권 분립 하에서도 여전히 미흡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반성 장치이고, 민간의 협력과 지지를 받아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기구이며, 국내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이면서도 국제인권규범에 의존하는 준국제기구이다.

인수위는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국가인권기구는 민중들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뿐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침해 현실에 눈감는 국가인권기구, 인권박탈의 현실을 인권의 언어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옹호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뿐이다. 당장 인수위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하라.

2008년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한나라당 부대변인 논평)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층이 코드에 맞추느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 온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HCHR)은 정권인수위가 왜 인권위를 조직개편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단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우리정부에 보내 온 것은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소 결여된 느낌이 든다.

지난 좌파정권 5년 동안 국가인권위가 아직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및 탈북자들의 인권을 애써서 외면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는 루이즈 아버지라면, 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가 지난 좌파정권 기간 내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심정적 이해와 더불어 인수위의 조직개편 노력을 이해했을 것이다.

앞으로 인권위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적 균형을 갖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상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조직의 법적 위상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새 정부에서 새로운 위상과 기능으로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대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 크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8. 1. 21

한 나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